

참여연대 25시

“신나는 사회를 위한 희망의 연대”

- 정책위원회
- 시민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 사법감시센터
- 공익감시센터
- 의정감시센터
- 인권센터
-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 국제연대실

“참여연대는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공동대표, 고문단,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상설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상활동은 집행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활동의 심화를 위하여 정책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의 실현과 인권보장의 확충에 전념하기 위해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 인권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서로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활동하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 각 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각 센터에서 제안한 문제나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이슈를 깊이 연구하여 입법 및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일상적인 사업을 기획합니다.

시민위원회는 참여와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시민들의 만남과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위원회는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단체별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과 사회인,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는 시민위원회가 이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시민들의 소중한 뜻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연대

21세기 사회발전과 연대의 모색

국제연대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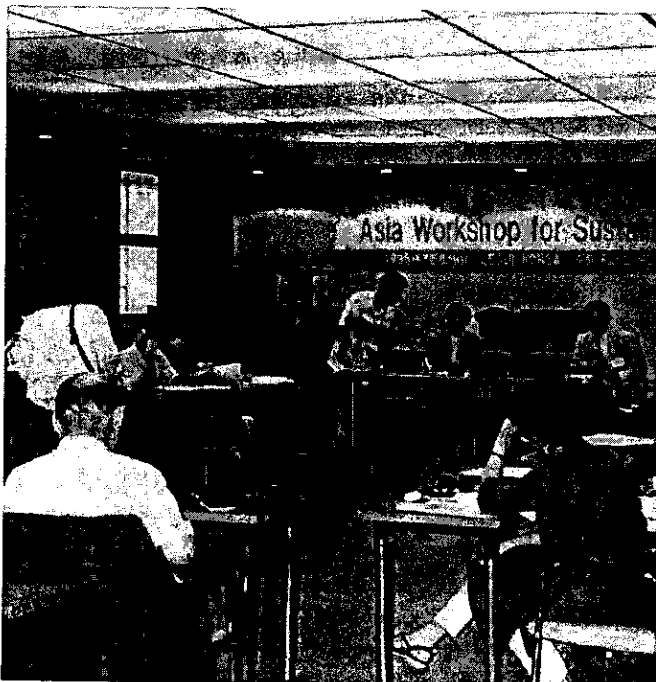
보통 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경을 넘어서 무언가 해 낼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뜻을 모으고 지혜를 교환할 수 있어도 강대국과 다국적기업이 지배하는 국제적인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수십 년 전부터 '용달샘 모여 시냇물, 시냇물 모여 큰 강물'을 믿는 '민간국제연대'의 실천가들은 크고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무시 못할 변화를 이끌어내곤 했다. 국제사면위원회나 그린피스도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그러한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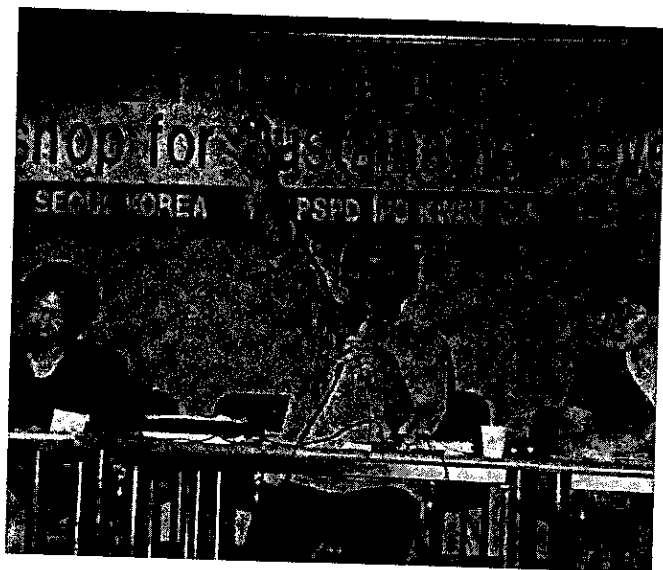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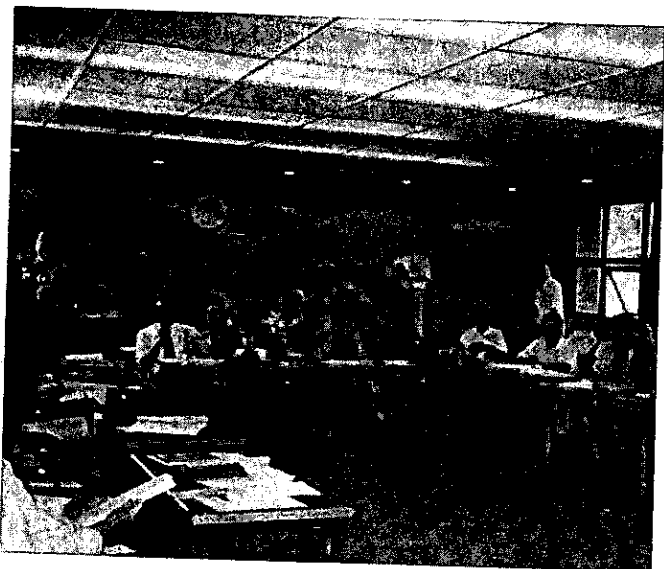
참여연대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국경을 넘는 '모여모여 큰강물' 운동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 시작은 지난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때 참여연대가 개최한 '급속한 경제발전과 관한 국제 워크숍'('참여사회' 창간호 86쪽 참조)이었다. 이 자리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그 후 속행사이면서 보다 아시아적인 워크숍이 지난 7월 8~9일 양일

간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개최됐다. 이 모임에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혼자 잘 살기'의 전통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아시아에서 좋은 이웃되기'라는 의미도 부여됐다(박스 기사 참조).

이 워크숍의 반향은 서서히 그리고 길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이-국가와 민간단체 모두-차지하는 독특한 위치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그 희생과 대가 역시 컸다", "한국의 경제수준은 높다. 그러나 복지와 시민안전은 밑바닥이다", "한국은 민주화됐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제도와 전통이 강하다", "통일이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내었고 한국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다. 그러나 백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한국인들은 일을 빨리, 계통있게 잘한다. 그러나 경직되어 있고 시야가 좁다", "한국의 수많은 사회문제에는 선진국형 문제와 후진국형 문제, 그리고 과도기 문제 세 종류가 혼재한다. 그래서 사회운동의 대처방식도 섞여있어 독특하다" 등이다. 이는 예리한 참가자들의 분석과 관찰내용이다. '한국에는 첨단전자산업과 삼풍사태가 병존한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우수 팽스려운 구분이 한국사회에만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됐다. 이러한 특성 또는 역사적 이중성을 가진 나라에서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시민, 사회운동의 과제'를 찾아보는 모임은 실로 중요하고도 귀한 기회였다.

참여연대는 이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뜻과 행동을 함께하는 아시아의 건설한, 민(民)에 뿌리를 둔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계속 넓혀나갈 것이다. 우선은 배우고 공감하고 나누기 위해서이고, 다음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이며, 나아가 국경을 넘는 '희망의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희망의 연대'는 경제개발중심의 전략에 대안이 될 만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내오는데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의 의견이었다(이 워크숍 관련 자세한 내용들은 영문/한글판으로 오늘 10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1. 워크숍 개최 취지

- (1)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이 직면한 과제와 변화양상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다.
- (2) 아시아 각 나라에서 진정한 사회발전을 추구하고자 받아

들이게 되는 공동의 '도전'을 확인한다.

- (3) 워크숍의 결과에 기초해서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향후 협력 및 연대활동의 방향을 제안한다.

2 주제발표 주요내용

주제발표1: 한국과 필리핀의 시민·사회운동의 성찰과 전망
에드 델라 토레(Ed dela Torre: 필리핀 대중민주주의연구소장)

발표 요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시민·사회 운동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여 그에 따른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특히 양국의 시민·사회 운동은 민족독립, 군사독제에 반대한 민주화운동, 미군기지의 문제, 최근 일련의 선거 등 공통적인 상황과 그에 대처한 공동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세계화 정보화 등 메가트렌드가 지배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지역운동에서처럼 '작은 운동'과 '새로운 공동체'가 더 큰 중요성과 '상황을 변화시킬 잠재력' 갖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국내적 아시아적 국제적 감각을 두루 갖춘 시민·사회 운동의 지도자들이 양성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워크숍은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해방 50주년인 올해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상징적이다. 아시아에서는 독립, 민족주의가 지난 반세기 동안 중요한 주제였다. 실제로 NIC의 의미는 50년 전 신독립국(Newly Independent Country)의 의미였다. 독립의 의미에 담겨 있는 원래의 민족주의는 패권적 민족주의와는 달랐다.

(1) 오늘날 사회운동에서 민족주의의 역할은 무엇인가? 엘리트 민족주의 대 대중적 민족주의, 보수적 민족주의 대 급진적 민족주의, 권위주의적 민족주의 대 민주적 민족주의 등 여러 가

지 상이한 접근 속에서 '70년대 사회운동은 민족민주주의의 영감을 상당히 받았다. 특히 필리핀과 한국에서는 외국 군대의 주둔이 민족주의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이제 주권과 외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 세계화 추세와 새로운 이슈 때문에도 그렇다. 또한 NIC의 뜻이 신독립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바뀐 데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듯 경제문제가 전면에서 부각되면서 민족적 대과제는 미완성인 채로 상황발전의 뒷편에 놓이게 됐다. 우리는 이제 '민족주의 해체와 재구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지구 남, 북 중간에 위치한 경제력을 가진 한국의 사회운동이 이 과제에 대한 남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 지구 남측의 빈곤과 저개발로 인해 NIC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NIC의 사회운동은 NIC 정부의 바람직한 국제적 역할까지 유도해야 할 과제를 갖는다.

(2) 독재에서 민간정부로의 이행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거 저항에 투입한 사회운동의 에너지를 보다 실질적인 민주화에 쏟기 위해서는 국가-시민사회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것이 많다. 대중적 민주주의 혹은 참여민주주의가 화두가 된다. 최근 시민사회론이 재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대의제 정당정치와 사회운동-민간정부 간의 관계 정립 문제에 기인하는 듯하다. 물론 탈정치적 시민사회론자들도 있지만, 비정당적 정치적 영향력은 역시 시민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3) 실질적인 민주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다양한 국제적인 거대흐름(메가트렌드) 속에서도 오히려 그 거대성으로 인해 작은 사회집단 단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진다. 최근 필리핀, 한국의 지방선거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관을 혁신하는 일이다. 작은 사회단위 안에서 다양성, 환경, 경제 문제를 연결시키는 일은 사회운동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제적, 국내적 통찰력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층을 양성해야 한다.

발표 요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지에서는 인류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환상적 메시아주의가 유행하는데 그것을 국가정책으로 옮긴 두 행위자는 군부와 관료들이다. 개발독재도 역시 국민을 가난과 무지에서 구원하겠다는 허위 메시아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메시아적 허구소명감을 갖는 군부와 관료의 개발전략이 가져온 폐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을 '구원대상'으로 대상화하면서, 정치의 대표성, 책임성, 일관성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발전지상주의가 결과였다. 시민사회의 행위자들로서 우리의 과제는 바닥 민중의 목소리에 귀기울리고 그들에게 의사결정권을 되돌려주는 일, 즉 아래로부터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이다.

주제발표2: 아시아에서의 발전패러다임의 현재와 미래
오제식 (한국사회교육원 원장)

3. 서울 선언문 주요 내용

우리는 매우 상징적인 때에 서울에 모였다. 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는 '경제중심개발'의 신화와 한계를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사회개발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민중 중심 발전'이 아시아의 발전패러다임이라고 확신한다. 아시아의 가부장적인 정통과 경제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성평등은 무시되어왔다. 성정의(gender justice) 없이는 지속 가능한 인간발전의 기반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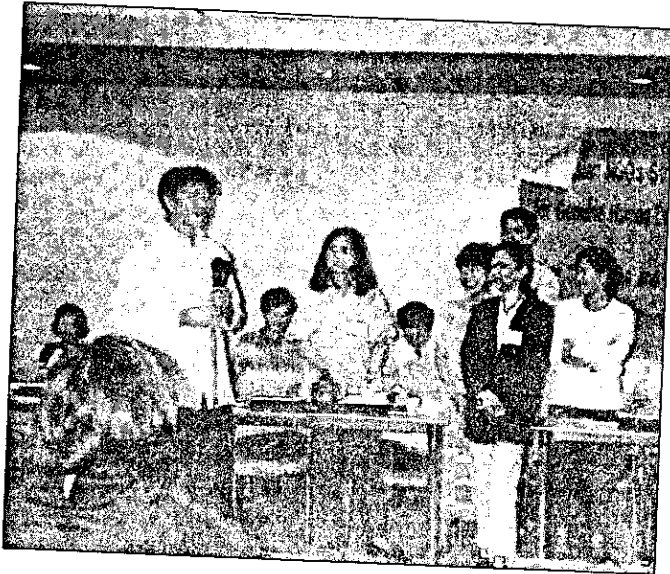
지금 세계는 과도기다. 무역과 자본 투자의 세계화는 증대되고 있고 국민국가는 혼란을 대처하는데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낡은 발전의 도그마와 새롭게 일어나는 전망, 양측의 극명한 대조속에서 사회운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판단한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사회통합과 민중참여는 강조되어야 필요가 있다. 불가분하고 보편적인 인권과 모든 결정단계에서 필수요소로서 민중의 참여

가 중요하다. 동서의 적대적인 냉전은 끝이 난 오늘에 준비확장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모델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휘젓고 있다. 이것은 많은 저개발국가에서 인권의 침해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낳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은 여러 차례 보고됐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더 이상 국내 노동자들이 종사하려 하지 않는 3D업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차별받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운동에서, 국내외 외국인 노동자의 연대는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도시화는 발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지역의 국가에서 농촌 공동체는 다수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토지개혁은 계속 강조되어야 하며 땅은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땅과 농부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ODA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민간단체의 감시와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ODA는 정



부의 협소한 필요보다는 민중을 중심,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으로 감시, 평가되어야 한다.

어려움이 우리앞에 놓여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안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민중은 어디에서나 스스로 권한을 부여했고, 스스로를 해방시켜왔다. 대안적인 농업, 자치의 실험, 생태적인 기업, 도시와 농촌의 직거래, 참여적인 경제체제의 추구, 지역정부의 참여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이 힘은 민중과 사회운동이 전망과 영감을 가지고 이끌 때만이 현실이 된다.

아시아의 맥락에서 우리의 전망을 현실화하는 전략으로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민(民)-민(民)의 연대와 지역에 기반을 두고 국가적,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지도자의 양성이다. 민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와 훌륭한 지도자의 양성은 밝은 미래를 위한 활력소다. 이 두 가지 전략은 사회운동이 앞장서서 용기와 기획, 실험, 조직적인 조정을 통하여 이끌어 가야만 한다.

- 워크숍을 함께한 아시아형제들

- (1) 필리핀 : Ed dela Torre :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IPD)소장
Jennifer Albano : IPD 입원
Carla A. Montemayor : IPD 언론담당
Catherine Venezuela : Philippine Peasant Institute

Joshua Mapa : Labor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

(2) 중 국 : 蕭鍊(Xiao Lian) : 中國社會科學院 美國研究經濟室실장, 교수

(3) 영 국 : Catherine Scott : Cathol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아시아과 상임연구원

(4) 태 국 : Premkaew Wanpen : Thailand Metalworkers' Federation 위원장

Boonthan Verawongse : Asia Cultural Forum for Development(ACFOD) 사무처장

(5) 홍 콩 : Neng Magno : Asia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ARENA) 사업부장

郭達韜(Kwok Tat Chiu) : 基督勞工教會 Christian Industrial Committee(CIC) 총무

Lakshmi Kiran Daniel : Documentation for Action, Groups in Aisa(DAGA) 연구부장

(6) 아일랜드 : Dardre Heyes : TROCAIRE - Catholic agency for World DevelopmentTrocaire

Janet Hugher : SIPTU Services Industrial Professional Technical Union

(7) 네 팔 : Rai Kumar :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GEFONT) 다슈립지역 위원장

4. 워크숍의 가이드라인 질문

- 최근 아시아 각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전략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지배적인 개발패러다임과 비교할 때 그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 기존의 개발전략에 시민의 복지와 문화, 그리고 환경보전의 이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 개발전략이 변경 또는 수정되는데 민중의 저항이나 생태계의 저항이 미치는 여파는 무엇인가?

- 시민사회와 그 행위자들, 특히 민주화운동이 21세기를 앞두고 받고 있는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 포괄적인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적인 발전전략의 구성요소와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의 결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반성은 무엇인가?

사법감시센터

‘5·18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한다’ 긴급 토론회

12·12 사건에 대해 검찰과 헌법재판소가 내린 국민의 뜻에 어긋난 결정에 이어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검찰이 또 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큰 실망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결정을 내린 검찰은 행정 기관이자 준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지난 7월 24일 (월) 오후 4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5·18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한다’는 주제로 5·18 검찰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했다. 시민과 학생, 교수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명선 서강대 철학과 교수이자 한국법철학회 부회장은 5·18 불기소조치의 법리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라는 주제로 “오늘날 국가가 해야 할 일, 특히 사법기관의 임무는 헌법규범 가치의 일부본인 현상질서의 유지를 통한 안정만이 아니라 헌법규범가치의 전체가 요구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정의와 인도, 인권의 존중을 통한 공공복리 내지 공동선의 실현이며 이는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통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교수는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처분의 법리적 근거를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지적했다. 첫째로 검찰이 인용한 쾨렌과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이론에는 실효성이나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의 추구는 정의의 요청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이들의 이론을 자신들의 논리에 맞게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검찰의 결정문에 나타난 법실증주의에 관한 것인데 오늘날의 대표적인 법효력이론은 법승인설이라는 것이다. 즉 사실적 세력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실효적이 될 때 그러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국민들이 그러한 사실관계에 신뢰를 보내며 그러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 법의 효력을 갖는 규범질서가 창설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쿠데타에 의한 새로운 정권 및 헌법질서 창출이 쿠데타

과정상의 제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국가의 법리에 반하는 이론으로 이것은 헌법자체의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헌법과 신헌법이 동일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원리로 한다면 헌법질서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 행위의 위헌성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법이론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검찰의 오류 이외에도 1980년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재검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경원대 법학과 한인섭 교수의 주장이었다. 한 교수는 검찰의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한마디로 “성공한 내란범에 대하여 누가 처벌할 힘이 있겠는가”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힘은 없어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범죄이며, 그럴 때 법률가들은 성립된 범죄를 범죄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말하자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형사소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확고한 명령이므로 이러한 헌법규정을 볼 때에도 성공한 내란범에 대하여는 더더욱 형사처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국민 및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의 박탈, 헌법상의 법앞의 평등원칙 위배,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범죄자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하여, 범인을 놓아준 결과가 되어 검찰은 형법상의 직무유기죄 및 범인은닉, 도피죄를 구성하며, 아울러 5공정권 성립에 전후하여 정치인들과 민주시민에 대한 정치군부의 숙청작업에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데 대하여 일대반성과 부끄러운 과거 청산작업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5·18 광주부상자동지회 김광호 씨, 양영태 변호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정영태 교수가 5·18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참여자들의 열띤 의견개진이 있었다.

현재 5·18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절대적으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근거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 토론회에서 거듭 밝혀졌듯이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비추어 5·18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가는 너무나도 분

명하다. 사법은 국민에게 법치에 대한 더 이상의 혼란을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

참여연대 뉴스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2일 연세대 장호순 기념관 원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참여연대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사회복지학교 입학식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사회복지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사회복지학교는 '사회복지의 대중화'를 위해 한국 사회 복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자 단위에서의 실천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입학식에서는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 힘찬 첫 발을 내디뎠는데, 오는 11월까지 각종 강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학교수 및 변호사, 사회운동가 등의 강의를 받게 된다.



참여연대 창립 1주년 토론회 및 기념식

참 여연대는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1주년 토론회 및 기념식' 을 갖는다.

제1부 기념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그 현황과 과제' 라는 주제를 갖고 김대환(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다. 발제는 유팔무(참여연대 정책위 부위원장) 한림대 교수가 '참여민주사회 어떻게 가능한가?-한국의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 이란 내용으로 말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이지범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서경석 경제정의연구소장, 허영구 민노총 집행위원장, 이석태 민변 사무

국장, 지은희 여연 정책전문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끝나는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안경환(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제2부 기념식도 갖는다. 기념식은 김종배(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의 활동보고,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대표와 고영구 민변 대표, 이미경 여연 대표의 축사, 공로상 및 시민참여상 시상, 이삼열(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숭실대 교수의 참여연대 1년 평가와 과제, 마지막으로 오재식(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의 새로운 다짐의 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창립 1주년 '회원의 날' 행사

참 여연대에서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7일 토요일에 을지로 3가 베를린호프에서 '회원의 날'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는 회원간의 만남의 장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참여

연대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를 수렴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한 회원 공감대 확보와 참여 향상을 위한 자리이다.

저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1995년 9월로 첫 돌을 맞이합니다. 참여연대가 창립한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부족하지만 시민사회 내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바쁘시더라도 모쪼록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참여하셔서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 일시: 1995년 9월 16일(토) 오후 2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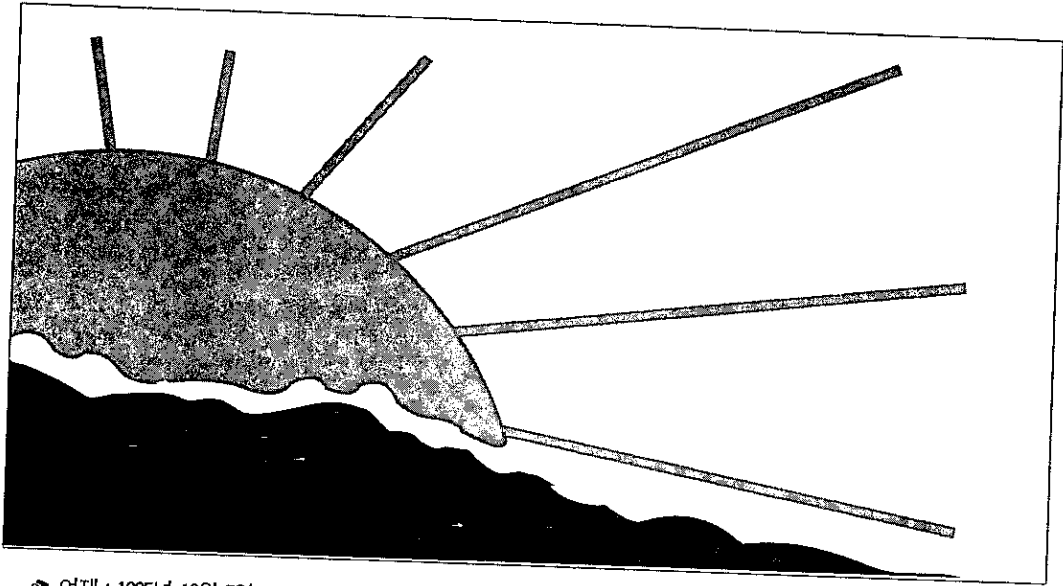
제 I 부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오후 2시~4시 30분)
 "참여민주사회 어떻게 가능한가?"
 - 한국의 시민사회, 시민·사회운동-

사회: 박호성(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발제: 유팔무(참여연대 정책위 부위원장)
 토론자: 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서경석(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이지범(환경련 사무처장), 허영구(민노총 집행위원장)
 이석태(민변 사무국장), 지은희(여연 정책전문위원장)

제 II 부 창립 1주년 기념식(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제 III 부 친교의 시간(오후 5시 30분 ~ 7시)

참여연대 창립 한 돌 맞이 일일호프

내일을 여는 큰 잔치



☉ 언제 : 1995년 10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10시

☉ 어디 : 2호선 을지로 3가 전철역 베를린 호프(상업은행 건물)

※ 오후 7시~8시 30분까지는 창립1주년 기념행사로 "참여연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밤"이 마련됩니다.

모시는 글

결실의 달 9월입니다.

참여연대 출범 한 돌. 신명나는 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소박한 염원을 모아 걸어온 1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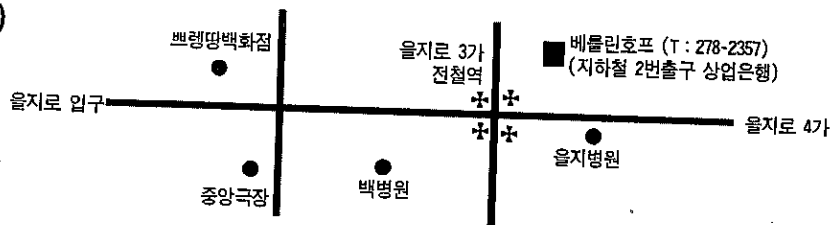
아직 우리 사회에는 희망보다 절망과 낭패감을 안겨주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일의 희망을 열고자 하는 참여와 연대의 의미는 더욱 빛납니다.

여기 지난 1년의 작은 결실을 함께 나누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시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약도)



※ 미리 티켓을 구입하시면 편리합니다(티켓구입문의: 796-8364).



멀티미디어와 정보화사회

-가까운 환상, 먼 현실

이주함
문화평론가로 수원대 철학 교수이며,
본지 편집위원이다

멀티미디어 상에서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이제 정보는 과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무한히 쏟아져나온다. 또한 모든 일이 화면상에서 처리된다. 그리고는 바깥의 삶은 무로 규정되고 사적이라는 것은 의미없는 공간이 된다,

멀티미디어 세계가 오고 있다. '세계는 하나'라는 거대한 표어를 앞세우고, 손거울로 세계를 보는 백설공주의 환상을 풀은 채 손 끝으로 세계를 지배(?)하라는 유혹이 실현돼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유명해졌다는 어느 시인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갑작스럽고도 빠른 속도로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함께 이룩하여 정보화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하버드대학 퍼트남

교수의 강의를 들은 후 영국에 있는 동생과 미국에 있는 부모와 가상 현실 식당에 마주앉아 함께 점심식사를 한다. 오후엔 인터넷을 통해 일본 동경대학의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고 밤에는 가상 현실 속에서 마돈나나 브레드피트와 데이트를 즐긴다.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할리우드에서 어제 배급한 영화를 보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유명한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멀티미디어가 보증하는 삶이다. 전화가,

대화는 만나서 하는 것이라는 통념을 깬으로써 대화의 개념을 바꿨듯 멀티미디어는 만남의 개념 자체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물적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삶인가?

미국에 있는 식구와 점심을?

많은 사람들이 멀티미디어가 가져다줄 정보화사회에 호기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컴맹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사회에서 컴퓨터의 역할이 지대할 것이라는 정도는 상식이며 정보화사회가 정보민주주의 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더 이상 몇몇이 정보를 독점, 자본과 힘을 갖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정보도 그것을 가진 자가 갖지 않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류를 통해 상호적으로 정보를 만들어가는 상호적 의사소통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가을에 입을 옷을 한 벌 구입하기 위해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인터넷 상에서 이탈리아
디자이너와 만나 그 디자이너가 권한
옷을 변형시켜 주문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놓은 옷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식대로 변형하여
주문하는 그런 것이 PDA를 통한
인터넷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손 끝에 세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는 음성, 문자,
그래픽, 영상 등의 정보를
통합(Intertive) 처리해서 이들 정보를
기기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멀티' 라는 이름이 시사하듯이 그것은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등
미디어의 다양한 요소들을 한 기계
내에 모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멀티미디어란 손 끝 하나로 텔레비전도
보고 전화 통화도 하며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단순한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멀티미디어 통합의
목적일까? 피상적

차원에서 본다면
편리함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제공해주지 않는
멀티미디어는 값비싼
장난감에 불과한가?
분명 아니다. 아닐
뿐더러 그것은 세계를
바꾼다.

도대체
멀티미디어가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그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한다. 미디어의 다양한 요소들을 한
기계 내에 모은 것이라는 멀티미디어
정의는 공허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멀티미디어는 제품이 아니라
시장 장르에 속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멀티미디어는 신제품이 아니라
기존의 생활양식을 전체적으로 바꿀
새로운 생활양식이며 가치생성
체계라는 것이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멀티미디어는 인식의 범주이지 개별적
인식이 아니다.

물론 멀티미디어는 제품의 수준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은 멀티미디어와
뉴미디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혼돈스럽게 사용되는 이 개념들은
사실상 차원이 다른 개념들이다.
뉴미디어가 케이블TV, 위성방송,
전자신문 등 새로운 미디어 장르로서
멀티미디어의 표현수단 내지 일부
제품군일 뿐이라면 멀티미디어는 정보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뉴미디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
전부를 가리킨다. 이 중에서 미디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의사소통을 쌍방향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쌍방향의 의사소통이면 민주주의?

정보화사회라는 후기산업사회에서
고도의 이윤을 남겨줄 상품으로 나타난
멀티미디어가 그를 태어나게 한 세계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면 인간이 만든 사회가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맑스의 소외
이론이 떠오르리라.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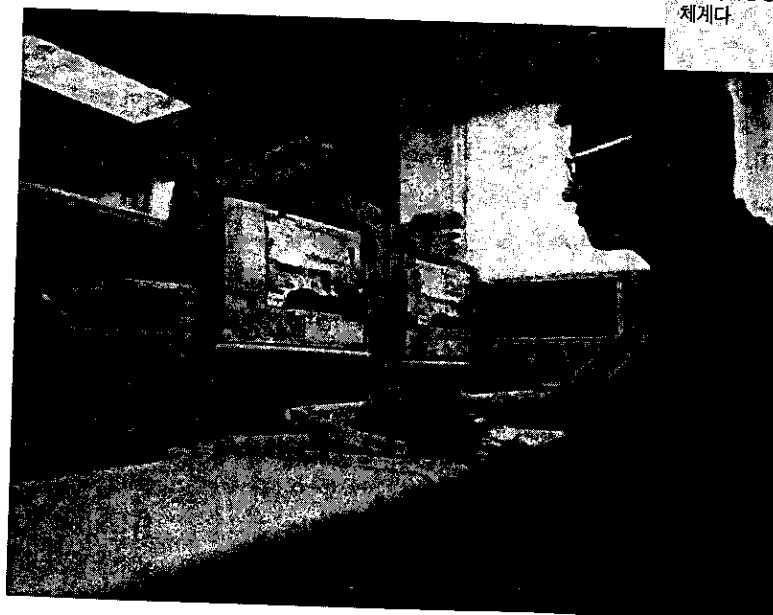
현대는 후기산업사회다.

후기산업사회의 중요한 형식은 그것이
정보화사회라는 점이다. 즉, 정보의
생산, 소비, 유통 체계가 일대 변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멀티미디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는 게 그것이다. 그렇다면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멀티미디어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정보의 생산,
소비, 유통구조를 흔들
수 있을까?

멀티미디어 속에서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여지껏의 방송, 라디오
등의 미디어는
일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매스미디어
사회에서는 의사소통이
쌍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단순히
'정보민주주의 사회'의

멀티미디어
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며 가치생성
체계다.



도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멀티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상호성', '쌍방향'은 민주화보다 정보 소비양식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보 소비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상호성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멀티미디어 사회에서는 '몇 개의 미디어 대 수많은 익명의 수용자'의 구도가 깨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2000년대가 되면 아시아에서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채널의 수만도 1,2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1,000개가 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는 더 이상 절대군주와 같은 권력을 전 발신자가

참여하기도 한다. 이른바 앨빈 토플러의 프로슈머(Prosumer: 생산적 소비자, 즉 생산자가 동시에 소비자이며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라는 말) 개념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소비자의 수 이상의 미디어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미디어가 발신하는 정보권 안에 있기보다 미디어 자체를 생산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설가의 경우 자신이 쓴 소설을 출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디어 상에서 유료로 공개,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팔 수 있으며 의사인 경우 미디어 상에서

노하우로서 존중됐고 환금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세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정보의 폐쇄성이 붕괴된다. 누구나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기존의 정보를 가공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 정보의 가치는 희소성이 아닌 과잉성에 의존하게 된다. 당연히 어디에 정보가 있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감옥문을 열고 나온 죄수가 해방된 몸으로 굶어 죽기가 쉽듯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미아가 되기 더 쉽다. 물론 이용되지 않는 정보는 유행을 창출하는데 실패한 기업이 도산하듯 쓰레기가 된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만 정보가 더 이상 '~을 위한 정보'와 같이 수단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목적 내지 소비 상품이 된다. 이는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한 편으로 얻은 수익이 현대자동차 1년 매출 수익보다 많다는 데서 여실히 증명된다. 월트 디즈니사가 ABC방송사를 인수했다는 사실로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사회는 제조업이 주가 되는 사회라기보다는 정보산업이 주가 될 것이다. 정보산업이 제조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성하게 되면 세계시장 구조는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이다.

서구사회의 축을 바꾸고 동양사회까지 급속도로 파고들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은 아직 유치하고 저급한 오락산업에만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단지 오락산업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그 세계로 흡수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당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업무, 머, 회의, 머, 거래, 머, 이제 모든 일은 화면을 통해 처리된다.

보내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지리하게 수용하기만 하는 수용자가 아니다.

거기에서 멀티미디어 상에서 소비자는 익명이 아니라 실명을 회복한다. 작은 예로 통신의 가입절차를 생각해 보면 실명을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멀티미디어 상에서 소비자는 ID번호로 행사하며 그것으로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기업에 직접 전달, 특정한 기업체와 의사소통하면서 생산에

중요한 상담 및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때 멀티미디어 상에서 다른 정보의 소비자인 이들은 또한 멀티미디어 상에서 자신의 정보가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정보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정보의 가치는 그 희소성에서 생성됐다. 정보는

멀티미디어 산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GATT체제가 무너지고
새롭게 구축된
WTO체제의 뼈대는
시장의 세계화이며 그
내용은 소위 '뉴미디어
전쟁'이다. 여기서 미국이
주도권을 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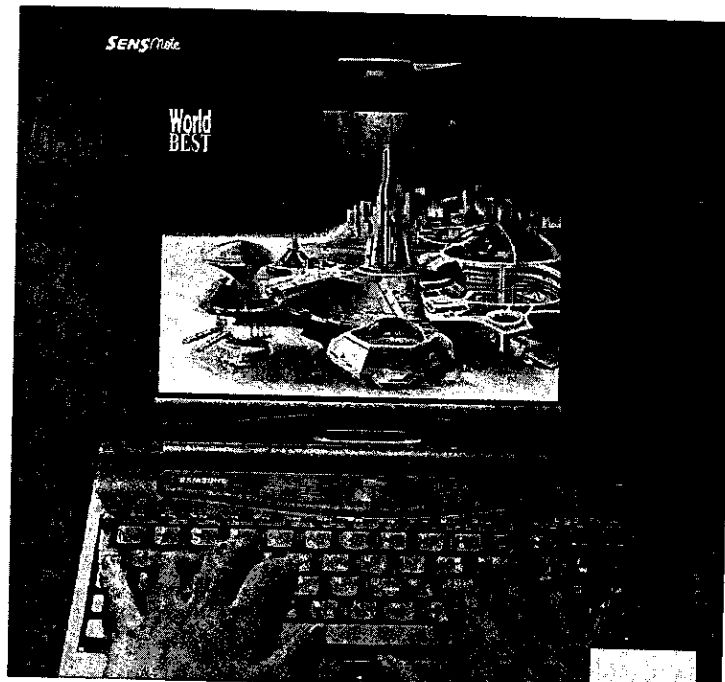
미디어를 통해서만이 존재 의의가

정보 그 자체가 어떤
것, 즉 상품에 대한
수단이었을 때 시장이
주어진 것이었다면 정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상에서 시장은 무한 팽창할
수 있다. 그 원리는 무한 팽창하는
우주와 같아서 막을 방도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양적 팽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바뀌는 것이다.
어떻게 바뀔까?

무엇보다도 화면상에서 모든 일이
처리되는 데 주목해야 한다. 화면으로
공부하고, 업무를 익히며, 회의를 하고,
거래를 한다.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화면을 통해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미디어 바깥의
삶을 무로 규정하는 일이다. 우리의
행적은 미디어를 통해 카드에 찍히며
카드에 찍히지 않는 삶은 단순한 사적
언어놀이에 불과하다.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진실이 숨어 있는 실존의
공간이 아니라 의미없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미디어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생활세계 그 자체를
규정하는 막강한 힘이 된다. 중요한
것은 진리나 진실이 아니라 진리라고



매스미디어 상에서 인간은 매스미디어 왕국을 유지시키는 ID번호일 뿐...

인정해주는 틀, 바로 미디어가 된다.
무엇을 말했느냐 하는 진리 혹은
진실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매체를 탔느냐는 것이다.
“나, 텔레비전에 나왔다”라는 의미없는
말밖에 하지 않고도 아는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텔레비전에 나오니 보라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지
정상이라고 이해되는 것과 같다.
메시지는 메시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메시지가 탄 형식 때문에 힘을 갖는
것이다. 이때 메시지는 분명 미셀
푸코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권력이며 또한 감시자다.

그 누구의 말처럼 미디어가 메시지다.
예를 들면 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
장소, 가격, 지불방법이 모두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에서
결정된다. 월드 와이드 웹,
이것이야말로 자율적 식민지를 뜻하는
세계화의 궁극적 지향점이 아닌가?
미디어는 단순히 특정한 내용을
전달시키는 매체가 아니라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 미디어는
김춘수의 시(詩) 「꽃」을
연상시킨다.

그대(미디어)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다만
하나의 흔적에 불과했다.
그대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가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노래해야 하는가?

정보는 많은데 진실은 없다

인간은 미디어의
계기로써 존재할 뿐이다.
X-세대, 신세대, 미시족의
자유와 개성선언이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전략이었던 것처럼
매스미디어 상에서 인간은

매스미디어 왕국을 유지시키는
ID번호일 뿐이다. 21세기가 간절히
원하는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는
인간이다. 피와 살을 나누고 살아있는
만남을 꿈꾸는 인간을 21세기는 원하지
않는다.

답그고 싶지 않지만 답글 수밖에
없는 세계, 그 세계란 멀티미디어와
함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분명 기계적인 풍요를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열정이 물질적
풍요로 환원될 뿐인 그 세계란 살과
피가 도는 인간의 삶에 어울리는
살아있는 세계가 아니라 자연의 강과
자본의 호텔 풀장이 구별이 되지 않는
거세된 세계일 것이다. 정보는 물처럼
흐르지만 진실은 신화처럼 공허한 세계,
그 세계에서 누가 진실을 지키는
돈키호테일 수 있을 것인가?



시민운동가를 위한 인터넷

- 자울에 기반한 연대, 인터넷의 세계로 가자!

고한석
 슬릿 조선키미디어에서 일하고 있다.

다가을 21세기를 우리는 흔히 '정보화사회'로 규정한다. 이미 전세계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국경이 허물어져가고, '정보'가 경쟁력에서 제1의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시민사회와 정보운동'이란 칼럼을 신설, 그 첫 회로 '시민운동가를 위한 인터넷'을 실는다.

이전에 정보화사회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 발제자가 맑스의 「공산당 선언」을 다음과 같이 패러디하는 걸 듣고 무척 흥미롭게 느낀 적이 있다.

“지금 인터넷이라는 유령이 지구를 떠돌고 있다..”

한 시대를 규정한 자본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한 19세기 초엽에 생산과 유통이라는 경제구조의 시대적 전형은 대공장과 철도였다. 물론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은 아날로그 형태, 즉 노동의 물화된 형태인 상품이었다.

이제 21세기를 눈 앞에 둔 지금, 앞으로의 생산과 유통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대표될 것이며, 이때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은 디지털 형태, 즉 모든 다양함이 0과 1로 재구성된 정보가 될 것이다. 그 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생활을 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는 공통점을 갖는다.

비록 상품의 유통이라는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철도가 구성되고 우편제도가 확립되어 갔지만 이에 대항하는 혁명운동이 일국 단위에서 조직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러한 교통양식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노동운동 중에서도 대공장 노동운동과 맞먹을 정도로 철도노동운동은 전국적 조직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인터넷과 진보적 시민운동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운동은 당연히 사회구조의 객관적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구성되고 추진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진보적 운동단체들 사이에서 PC통신을 이용한 정보교환(아직 기업체들에 비하면 사용형태나 마인드가 지극히 원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자우편, 대화방, 게시판, 자료전송 등을 통하여 단체 내에서 또는 단체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일반 이용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려나가는 유효한 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언제나 한 발 늦게 나아가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부르짖는 세계화라는 구호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회를 포함한 전세계는 자본의 요구에 의해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인하여 국경이 희미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의 커다란 취약점 중에 하나가 국제적 정보와 연대에 약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마치 아무런 규제 없이 콘솔 카우보이(Console Cowboy)들의 천국이었던 서부 개척시대 처럼 인터넷이, 그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정부조직들과 기업체들에 의해 총잡이들을 대신하여 보안관과 은행, 상점들이 마을에 들어서듯이 규제화, 상업화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정보화사회의 자기속성상 가면 갈수록 정보의 독점이 어려워지고 기업체들이나 일반인이나 최신 정보를 접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차이가 없어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인터넷 사정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주로 학술 연구자들(그것도 이공대 쪽)만이 사용해왔고, 최근에 와서야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사용방식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늘기 시작했지만, 아직 모두에게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국내의 취약한 시민운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시민운동단체들과의 정보교류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철학을 알아야

그렇다면 도대체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곳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다. 네트워크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상호연결시킨 것이며, 인터넷이란 그런 네트워크들을 상호연결시킨 것이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터넷의 철학이다. 컴퓨터란 것이 지극히 복잡한 기계들과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집합체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 LAN을 통한 다운사이징으로 대표되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는 기존의 메인프레임-터미널 구조와 비교할 때 매우 민주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 및 조직이 복잡해지면서 중앙기구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왜 현실사회주의가 소멸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또한 개별자들의 처리능력이 향상되면서 처리 권한이 대폭적으로 하부로 이양된 상태, 즉 일종의 지방자치체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구현된 형태인 것이다. 중앙기구나 기업체들은 지역 또는 이용자에 봉사하는 봉사자(Server)이고 중심은 고객/의뢰자(Client)에 있다는 철학이다. 이는 최근의 기업체들에서 강조하는 고객만족 리엔지니어링과도 일맥상통한다.

인터넷 즉 네트워크 간의 연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는 프로토콜의 등장이다. 프로토콜이란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일종의 규약으로 이것이 서로 맞지 않으면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판독할 수가 없다.

초기에 나온 여러 프로토콜들은 대개는 특정한 운영체제의 데이터 교환만을

네트워크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상호연결시킨 것이며, 인터넷이란 그런

네트워크들을 상호연결시킨 것이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터넷의 철학이다.

컴퓨터 배후에는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지원하였다. 그러나 TCP/IP의 기본 정신은 이기종 간의 데이터 호환을 거의 완벽하게 지원한다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이를 일컬어 오픈 컴퓨팅(다른 언어 구조나 하드웨어에 대해 개방적인 컴퓨팅)이라고 한다.

하나의 네트워크는 자신의 특성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이다. 만약 이러한 네트워크가 배타적이라면 자신의 정보는 보호할 수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고립된 사회의 한계인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네트워크와 교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의 운영체제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발상이고, 동시에 자신의 독자성을 잃고 단지 전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게 된다.

TCP/IP는 거기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특성의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준다. 자율에 기반한 연대,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시민운동가들이 활용할 만한 인터넷

모든 정보와 명령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을 뻔다면 인터넷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지

월드 와이드 웹 대표적인 진보적(?)

Resource Guide Site는 Progressive Directory다. 이곳에 들어가면 PeaceNet, EcoNet, ConflictNet, LaborNet, WomensNet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 NGO(비정부기구) 네트워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만 그 기본 기능은 하이텔이나 천리안, 나우누리과 동일하다. 유닉스가 어렵고 어찌고 하는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손쉽게 사용하는 하이텔의 명령어가 유닉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도스의 명령어 역시 유닉스의 명령어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예를 들자면 dir이나 cd, md 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아니다.

인터넷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매뉴얼들이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라고 여기서는 내 자신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아, 인터넷을 이용하면 이런 유익한 점들이 있겠구나' 하는 시사점을 얻어 한번 도전해볼 마음이 생긴다면 나는 만족한다.

WWW(World Wide Web)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유닉스 시스템에서의 텍스트 중심의 정보 입수가 아니라 화려한 이미지와 사운드 클립, 파일 다운로드를 동시에 지원하는 일종의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인 월드 와이드 웹이다.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명칭은 정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

미줄처럼 전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래한다. PC상에서 윈도우용 통신프로그램인 Winsock과 Netscape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화면에 나오는 정보들 중에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단어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른 컴퓨터에 존재하는 관련정보로 바로 연결이 되어 화면에 뜨게 된다. 이런 식으로 끝없이 정보는 연결되어 있다.

또한 검색 프로그램인 Net Search로 키워드나 단어를 입력하면 그에 관련된 정보 소재지들을 일일이 알려주며 이 역시 한 번의 클릭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컴퓨터 관련서적이나 잡지를 참고하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볼 만한 사이트(정보 소재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사이트보다도 Resource Guide Site 즉 해당분야의 관련 사이트들을 안내해주는 사이트를 찾는 것이다. 지면상 모든 사이트들을 소개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물고기 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얻는 것이 좋으므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배워보기로 한다.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검색 페이지인 Yahoo의 Government 디렉토리 내의 Politics 페이지로 가면 시사, Activism, 검열, 시민운동, 르완다 사태, 각종 선거, 잡지, 선언들, 핵실험, 정당, 특수이해집단, 정치학, 외교, 예산 등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알려주고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

Yahoo의 Society & Culture 페이지로 가면 낙태, 환경/자연, 성차별, 인권, 아동, 무주택자, 기아, 소수인종, 범죄, 동성연대 등의 주제들과 관련된 사이트들로 연결될 수 있다.

대표적인 진보적(?) Resource Guide Site는 Progressive Directory다. 이곳에 들어가면 PeaceNet, EcoNet, Conflict-

Net, LaborNet, WomensNet이라는 네 가지 대표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 NGO(비정부기구) 네트워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X세대 정치집단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미국의 'Lead, or Leave'라는 단체의 홈페이지도 관련된 여러 사이트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이트는 Electronic Democracy Forum이다. 그리고 공화당의 대표주자인 킹그리치의 사이트로는 NewtWatch가 있다.

Marxism Page라는 사이트에서는 칼 맑스와 앙겔스, 레닌 등의 영문원전을 텍스트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서널 관련자료와 사진들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최근의 맑스주의 동향도 알아볼 수 있다. 참고로 여기는 국제사회주의와 관련이 있어 한국의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에 대한 석방 캠페인 페이지도 있고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영국 노동당의) 구원노력도 서술하고 있다.

버클리에서 있는 Economic Democracy Information Network도 가이드로서는 랜창은 곳이다.

Archie/FTP

WWW에 올라와 있는 정보(물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아직도 많은 형태의 정보들이 일반적인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그것은 PC통신의 파일 다운로드 받기와 비슷한 FTP(File Transfer Protocol)로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를 도와주는 도구가 Archie이다. Archie Server 프로그램이 설치된

호스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나 파일명을 입력하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FTP 프로그램을 띄워서 그곳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이때 대부분의 디렉토리는 자신의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설명하는 문서파일이 있는데 거의 인덱스라는 파일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작정 파일을 다운받기 보다는 먼저 이 인덱스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적합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운 받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WS-ARCHIE와 WS-FTP가 대표적이다.

Usenet News Group

뉴스그룹이란 쉽게 말하면 PC통신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동호회나 게시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유즈넷이란 이렇게 순전히 사용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시판, 포럼들의 총합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유즈넷 서버(NNTP Server)들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특정한 뉴스그룹에 가입하여 글을 보내면(이를 Posting이라고 한다) 자신이 지정한 유즈넷 서버를 통해서 전세계의 해당 뉴스그룹 메시지를 받는 유즈넷 서버들의 해당 뉴스그룹 게시물로 등록되는 것이다. 뉴스그룹은 약 8,000개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거의 다루지 않는 주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뉴스읽기 프로그램(Reader)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WIN-VN과 Agent이고 Netscape로도 뉴스를 읽고 보낼 수 있다.

Activist와 관련된 뉴스그룹들을 예로 들면 alt.society.revolution, misc.activism.progressive, atl.activism, alt.activism.death-penalty, alt.politics.radical-left, alt.censorship, alt.freedom.

of.information.act, alt.politics.sex 등이 있다.

Mailing List

앞에서 언급한 뉴스그룹은 TV처럼 사용자가 직접 뉴스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뉴스그룹을 찾아서 읽어보아야 하지만 메일링 리스트는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처럼 자신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전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보내오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정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간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특정한 서버에 전자우편을 보내면 그 Mailing List에 등록된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시간단위로 묶어서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Mailing List다.

활동가들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Mailing List인 Activist Mailing List의 경우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고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시민운동, 반핵활동, 집회 및 대회, 회의, 주장들이 하루에도 약 100통 이상이 배달되기 때문에 이것에 가입하면 이 메일을 읽어보고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한 Comp-Academic-Freedom-Talk 라는 메일링 리스트 역시 컴퓨터와 표현의 자유, 각지의 인권에 관한 소식들과 자신들의 정보를 하루 평균 약 30통씩 보내준다.

Mailing List에 대한 리스트는 A4용지로 400장이 넘으므로 여기서 다 소개해줄 수는 없다(필요한 사람은 내게 요청하거나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의 자료실이나 인터넷 관련 동호회 자료실을 뒤져보라).

그밖의 활용방법

이 외에도 여러 명에서 함께 국경을 뛰어넘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뉴스그룹이란 쉽게 말하면 PC통신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동호회나 게시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유즈넷이란 이렇게 순전히 사용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시판, 포럼들의 총합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유즈넷 서버(NNTP Server)들에 저장된다.

IRC(Internet Realy Chatting)을 사용하여 외국인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폰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음성으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Telne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른 시스템에 원격접속하여 그 시스템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천리안과 나우누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Telnet으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에 널려있는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나는 우선 WWW으로부터 출발하여 E-Mail(전자우편), News Group, Mailing List, FTP, Telnet, IRC의 순으로 배워볼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러고나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Netizen이 될 수 있을 것이다(참고로 나의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는 hsko@solvit.co.kr이고 홈페이지는 <http://battery.solvot.co.kr/>이다. 그리고 하이텔 ID는 ChinChin, 나우누리 ID는 chinchin이며, 현재 하이텔 바론통신을 위한 모임과 나우누리 21세기 프론티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제3영화'

정선일

영화평론가이며, 영화잡지 『기노』 편집장이다.

1895년 12월 27일 파리의 카뮈시네가 그림카페에서 처음 선보인 영화. 시민사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그 영화는 할리우드와 소비에트에서 각기 다른 역할로 발전해갔고, 전쟁중에는 파시즘의 세균이 되기도 했다. 한편,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제3영화' 개념이 등장, 이른바 '인민의 영화'가 만들어진다.

시민사회가 근대화의 다른 이름이었다면, 모더니즘이 만들어낸 영화는 처음부터 시민사회의 산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영화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부르주아들의 고상하고 낡은 장난감이 아니었다. 영화관은 소란스럽고, 담배 연기가 가득하여, 그리고 불거리라곤 별로 없었던 대다수 도시 노동자들의 안식처였다.

영화는 1895년 12월 27일 파리의 카뮈시네가 그림 카페에서 처음 선보였다. 귀족들은 관심이 없었고, 부자들은 마치 서커스라도 보는 것처럼 신기하게 생각했다. 이 낯선 구경거리를 가장 먼저 열광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이들과 여인들, 부랑자들, 노동자들, 그리고 갈 곳 없는 노인들, 이민 온 하층민들, 이제 막 독립됐지만 팔 것이라곤 노동밖에 없는 '색깔있는' 남자들이었다.

시대의 모순, 할리우드와 소비에트 영화

그러나 영화관은 대중집회의 장소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거기 꿈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 곳에서 하루의 근심 걱정과, 슬픔, 절망, 낮 동안 흘린 소금을 잊었다. 그들은 거기서 일시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영화는 시민사회의 치료제이자 독약이 됐다.

아마도 그 가장 극적인 예는 할리우드와 소비에트 영화일 것이다. 할리우드는 이미 영화사 초기에 시작된 복합자본의 산물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여흥 시간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빼앗는' 방법으로 영화가 새롭게 등장했다. 자본가들에게 은행은 돈을 빌려주었고(초기 할리우드는 금융자본으로 시작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모래사막 위에 함께 모여 영화사들을 설립했다. 영화는 처음부터 분업화된 노동의 유기적 결합을 바탕으로 생산됐다. 그리고 완성된 프린트가 수백 벌로 복제되어 영화관에 뿌려졌다. 1902년 이미 스타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액션과 웃음과 사랑이 상품으로 바뀌었다. 이제 누구든지 5센트만 있으면 그걸 살 수 있었다. 더 이상 귀족들만이 그걸 누리는 것은 아니었다. 꿈은 구경거리가 됐고, 사람들은 그걸 동시에 모여서 소비했다. 할리우드에서 영화는 꿈이며, 상품이며, 이데올로기가 됐다.

그러나 영화는 우리 시대의 모순이다. 영화는 방패가 됐지만, 그 방패를 뚫는 창이기도 했다. 바로 동시대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소비에트에서 '젊은' 예술가들은 영화만이 부르주아들에게 물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영화가 유물론적 예술이며, 또한 변증법적 실천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영화야말로 세상에

대한 변혁을 설명할 수 있는 인민의 예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에이젠 슈테인의 <전함 포템킨>, 푸노프킨의 <어머니>는 바로 그 실천의 예이다.

나치즘의 또 다른 선택, 다큐멘터리 <의지의 승리>

그 어느 쪽이 옳았던 것일까? 영화는 그 양쪽의 평행선을 타고 달렸다. 그러나 영화가 그 어느 쪽도 아니면서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은 나치즘 선전상 괴벨스였다. 그는 영화에 선동적인 '욕망'이 숨어 있음을 읽었다. 조금 과장을 해볼까? 괴벨스는 포스트 모더니스트이다. 그는 영화가 현실과 시뮬라크라, 진짜와 가짜, 이미지와 이야기 사이의 경계를 '지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영화는 여기서 이데올로기의 총탄이 되어 권력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냈다. 영화는 시민사회의 전염병이 됐으며, 파시즘의 세균이 됐다. 진실을 전하는 다큐멘터리는 나치즘의 휘황찬란한 스펙터클이 되었고, 그 곳에서 영화는 역사상 유래없는 힘을 발휘했다. 만일 레니 리펜슈타르의 <의지의 승리>를 본다면, 말 그대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다큐멘터리 앞에서(히틀러의 연설 장면을 46대의 카메라로 촬영했다) 어쩔 수 없이 매몰될 것이다. 정말 바그너적인 이 기록영화는 지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토킨>의 장면들.

금도 영화사상 가장 '뛰어난' 다큐멘터리의 한 편이며, 동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영화의 경험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화는 원컨 원컨 않건 자기의 시대, 자기의 장소, 그리고 그 곳에서 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의 일상생활의 반영이다. 그것은 영화가 어느 개인의 저술이 아니며, 항상 집단적이기 때문이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 바깥에서 사회 속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삶을 가지고 카메라를 통하여 영화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질서는 항상 현실의 질서, 바로 지금의 질서와 겹치고 때로는 맞선다. 하지만 그 질서의 부재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러하다면 영화는 언제나 기계적 복제, 또는 기계적 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영화는 변혁 이후에만 항상 유효하며, 변혁 이전에는 언제나 보수반동적인 것일까?

바로 그러한 생각에 맞선 것은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 영화였다.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솔라나스와 옥타비오 게피

노는 '제3영화'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제1영화'를 자본이 영화를 규정하는 할리우드 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 영화로 분류하였고, '제2영화'로는 소위 예술영화라고 불리는 작가영화, 즉 19세기 부르주아의 유산을 이어받은 유럽 영화, 또는 이러한 사고를 하는 영화를 지칭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권력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이것과 싸우기 위해 '제3영화'를 제안했다. 그것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서로 함께 토론하고 협력하며 만들어나가는 '인민의 영화'다. 거기서 비로소 영화관객은 생산주체가 되며, 영화 감독은 일방적인 전달자가 아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제3영화'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영화가 있다. 볼리비아의 호르테 산티네스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모임인 우카마우집단과 함께 <콘돌의 피>, <인민의 적>, 그

리고 <이 땅에서 나가라!>를 만들었다. 그는 실제로 주민들과 미국의 의료봉사단(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행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유혈 참극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그곳에 갔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시나리오를 쓰고, 틀린 대목들을 일일이 지적받으면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이 왜 싸웠는지에 관한 이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얻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것은 우리의 속담 그대로 '도둑 한 명을 열 명의 장정으로 막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시민의 권리를 훔치려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때로는 영화가 동원될 지도 모른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 영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것 또한 영화일 것이다. 문화의 헤게모니 논쟁은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것이다. **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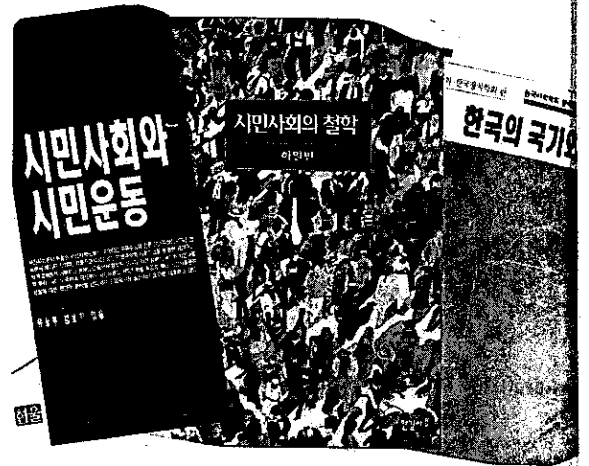
진보의 제 길 찾기

-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실천

선종효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중 수료했다.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진보학계는 반(反)맑스주의자부터 각종 포스터주의자에 이르기까지 한 마디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실사회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그 의미를 이론화시켜, 그것을 운동의 차원으로 활용하려는 이론가들의 저작들이 나와 길 잃은 진보진영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고 있다. 그 저작들 중,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시민사회의 철학』을 묶어 소개한다.



'80년대의 시대 의미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두 도시가 있다. 그것은 '광주'와 '베를린'이다. 세계지도를 펼쳐봐도 지금껏 배운 자리의 모든 지식을 상기해도 언뜻 연결되지 않는 두 도시의 이미지가 동시에 기억되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진보의 가능성을 믿고 한국의 '80년대를 달려온 사람들의 죄 없는 위장을 소주로 녹이게 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무고한 인명 학살과 부정한 권력의 야만성을 경험한 광주가 우리를 지키는 방식은 굴종이 아닌 저항임을 일깨운 '80년대의 시작이었다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와 더불어 땅치소리 드높이 무너진 베를린의 장벽은 우리의 기대가 환상이었다는 조롱과 함께 막내린 '80년대의 끝이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진보학계도 새로운 지형을 형성해가고 있다. '근조(謹弔) 맑스주의'를 선언하여 발빠른 장례식을 거행하고, 자신의 발목을 잡던 맑스주의로부터의 탈출을 감행하는 학문적 '청산주의자'에서부터 '새로운 것은 선한 것'이라는 각종 '포스트(Post)주의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진된 유토피아 이데올로기에 기만당하고 있었다는 '반(反)맑스주의적 엄숙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가 제 시대를 만났듯 터져나오고 있다.

비판능력을 상실한 비판과학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의 확대 속에서도 현실사회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동시에 그 의미를 이론화시키며 나아가 그것을 우리의 삶이 놓여진 지점들에서 운동의 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이론가들의 저작이 출간됐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미국의 위대함은 마돈나의 엉덩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기억되고, 소련의 추악함은 어린 체조선수들의 선전에 의해서 보상받는 3류 코메디를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의 허약함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겪지 않은 이 암울한 시대를 기억해다오'라는 지식인의 소명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향로없는 길을 찾아 나선 진보진영의 외로운 길 찾기를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한울: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한울: 유팔무, 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의 철학』(한길사: 하일민 저)을 통해 추적해보도록 하자.

시민사회의 성장과 구조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정리한 학제간 연구서이다. 그간 지적 전문주의의 협애성과 사회와 유리된 아카데미즘의 틀을 깨고 당면현실의 문제를 과감히 노출하며 분과학문이 가진 고유의 전통과 특성의 교류를 시도하고 전문성과 총체성의 유기적 결합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저작이다.

연구자들은 '80년대 이후를 전세계적으로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투쟁이 전개된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당에 의한 권력독점과 자의적 권력행사, 민주주의의 부재에 저항한 동구 사회주의의 일련의 경과를 시민사회 수립의 진동으로 정의하며 남미와 남유럽의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과정 역시 시민사회의 반란으로 해석된다. 또한 서구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

편 역시 복지국가의 과도한 경제영역에의 규제와 개입, 중과세에 대한 중상층의 거부가 간접적으로 사회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인식 하에서 주목되는 것은 저자들이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그 성격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있다. 일본 식민지 지배, 한국전쟁과 외세의 개입, 군사 독재 정권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질식된 시민사회는 '87년 민주화 투쟁의 경험에서 서서히 그 기력을 되찾아갔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길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87년의 가장 큰 목소리였던 직선제 개헌이 우리에게 '아테네의 봄'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었으며 1만 달러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요구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또한 대기오염은 산소마스크로 해결될 수 없었으며 입시지옥이 대학설립으로 해결될 수도 없었다.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우리의 삶이 놓인 이러한 다차원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생활주체의 투명한 상호결합과 공동성의 회복전망을 제시한다는 데 있어 진지한 고민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시민사회의 한국적 모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헤겔과 맑스로부터 시작되는 시민사회의 개념사적 전통을 현대적 시각에서 복원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특히 '8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 이후 시민사회 논쟁이란 이름으로 전개된 진보학계의 좌표찾기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이다. 많은 논자들은 그람시와 하버마스의 맑스·레닌주의 재해석-경제결정론적 해석, 국가주의적 사고, 정치투쟁 일변도의 혁명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재개념화 전략으로서의 신사회 운동 및 '시민운동의 활성화,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사고-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과거의 '그레야 함'이라는 당위를 강조함으로써 '그럴 수 있음'의 현실성을 간과한 지적인 독선이나 원전의 남용이 과학적 인식인 양 과도하게 주장되어온 지적 나태함을 반성하고, 창문 속에 풍경이 들어있으므로 창이 산, 들, 하늘보다 더 크다고 보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성실성이 이 저작의 최고의 미덕이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와 이태올로기의 효과 속에서 이루어진 편중된 담론의 세계에서 어떻게 저항의 담론을 생산하고 대항적 헤게모니를 구성할 것인가를 궁구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시급한 이론적 과제라는 점에서 단순히 혁명/개량의 이분적 사고나 시민운동의 탈계급성을 문제삼는 편협한 민주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위기는 낡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헤겔과 맑스로부터 시작되는 시민사회의 개념사적 전통을 현대적 시각에서 복원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학문과 생활의 영역에서 급속히 부상한 시민사회론의 이론적 토대가 사회학과 정치학의 전매품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현대의 역사적 지평을 근대적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시민사회를 논급한 학자를 사상사적으로 분류한 『시민사회의 철학』은 시민사회의 인문학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새로운 것은 탄생하고 있지 않은 데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바로 이 때문에 위기의 시대에는 낡은 것에 대한 온갖 집착과 함께 새로운 것을 구축하기 위한 자기변신의 힘겨운 모험이 감행되는 것이다. 가짜 위안과 화해로 고통이란 없는 것처럼 위장하여 인간을 허구의 현실 속으로 함몰시켜버리는 이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스스로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는, 그럼으로써 이 세계와 이 세계에서 삶을 증언하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철학과 전망

학문과 생활의 영역에서 급속히 부상한 시민사회론의 이론적 토대가 사회학과 정치학의 전매품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현대의 역사적 지평을 근대적 역사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시민사회를 논급한 학자를 사상사적으로 분류한 『시민사회의 철학』은 시민사회의 인문학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루소, 흄스, 로크 등 자연주의자에서 헤겔, 맑스를 거쳐 그람시, 하버마스, 라클라우와 무페에 이르는 긴 사상의 여정을 명료하고 요연하게 정리·비판하여 시민사회의 이론적 지형을 살피는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이론가들의 위기와 희망의 논의를 보며 문득 현대의 위기는 삶을 해석할 학문과 학문이 검증될 삶이 서로 다른 궤적을 가지고 유리된 일상의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는 위기는 국가정당성의 위기도 전망부재의 위기도, 생활세계 식민화의 위기도, 소외와 몰화에 의한 인간의 위기도 아닌 파편화된 일상이 학문과 다르게 구조되는 학문/생활의 위기인 듯하다. 그래서 위기는 더 이상 위기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필자**

독자마당

한국의 시민운동은 몇 점인가?

가끔 외국 영화에서 힘없는 개인이 거대한 국가권력에 대항에 정의를 찾는다는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나는, 물론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서구사회에 활성화돼 있는 시민운동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시민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나 비판을 담당할 자발적인 시민운동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에서는 다양한 기획을 통해 국내외의 시민운동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승호(비디오숍 경영, 경기 과천시)

‘대학 개혁의 길 찾기’, 교육개혁안 문제 핵심 짚어

우리의 교육이 길을 못찾고 표류한 것이 어제오늘은 아니다. 그 동안 ‘참교육’ 실천을 향한 교육환경 개선 등 전교조 및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고, 과거와는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현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을 처음 접했을 때 획기적이라 이제는 정말 뭐가 달라지는가보다 하는 기대감에서 환영했다. 사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은 있어왔다. 그 때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21세기를 앞두고 백년지대계의 뼈대를 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앞선다. ‘종합생활기록부’만 해도 그렇다. 그 자체로는 정말 좋은 내용이나 일선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콩나물 시루의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과연 부작용 없이 그 성과를 얼마나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겠다. 더욱이 『참여사회』의 특집인 ‘대학 개혁의 길 찾기’에 실린 여러 선생님들의 지적처럼 대학 교육을 비롯 우리의 교육이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될지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다. 아마 그럴 경우 자칫하면 과거에 있어왔던 것보다도 더 큰 폐단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현 정부가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에서 중학교 교사 김아무개

‘30대 역할론’이 정치 지향은 아니길...

요즘 사회 각계에 ‘30대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데 고무받는다. 실제 내가 그런 모임에 직접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같은 30대라는 동년 의식에서도 그렇고, 그보다는 ‘80년 5.17을 시발로 ‘87년 6월항쟁 등 격동의 역사 속에서 대학시절을 보낸 동시대인으로서 이 사회 건강한 대안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몇몇 30대 모임 가운데는 정치 지향적인 모임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정치 지향이 나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구시대의 작태만을 답습하는 우리 정치풍토에 새 바람이 일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런 정치 지향이 마치 모든 30대들의 견해를 대변하고, 모든 30대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정치적 생각은 물론 다를 수 있다. 단지 문제는 이로 인해 다른 여타의 30대 모임이 도매금의 정치 지향 모임으로 오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기에 이제는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다.

박영진(회사원, 안양시 비산동)

『참여사회』, 다른 매체와 차별성을

매체의 홍수시대다. 일요일날 재활용품 분류를 위해 정리하다보면 인쇄물만 한 주일분이 가슴 가득하다. 그러나 동시에 매체의 빈곤을 강하게 느낀다. 왜일까? 한 아이의 어머니로 나아가 다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동심의 질문에 답이 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왜 어른들은 백화점이 무너지게 지었나요” 수많은 매체를 접하지만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그 전에 당장 나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이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참여사회』는 그런 면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긴 호흡으로 우리 세대의 희망찾기를, 지식세대는 더 이상 사건·사고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는 고민의 하두를 던져줬으면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생활 속의 자치적 요소들을 발굴, 한 발 한 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준다면 『참여사회』 다음 호가 더욱 기다려질 것 같다.

우혜경(학원장, 경기도 광명 푸른말글 학원)